

### 1. 총평

2020년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문제의 일부 지문의 경우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답 선택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6번의 일부 지문, 12번의 일부 지문, 16번의 4번 지문, 19번의 3번 지문, 20번의 일부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출제될 경우 정답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개의 지문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번 지문의 경우 ① ②④번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은 조세(국세나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시험문제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번(조분평가, 서요직직 분점직기), 6번(이퇴백재선-윤리), 8번(하향 사마), 10번(카영개지), 12번(라가 크비) 등은 두문자 암기와 연상을 통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임).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우수(개인적으로 원하는 점수는 95점 이상), 80점에서 85점까지는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 교재 영역별 |   | 문제유형별 |    |
|--------|---|-------|----|
| 기초이론   | 3 | 개념문제  | 1  |
| 정책학    | 5 | 이론문제  | 11 |
| 조직이론   | 3 | 학자문제  | 4  |
| 인사행정론  | 4 | 법령문제  | 4  |
| 재무행정론  | 1 |       |    |
| 지방자치론  | 3 |       |    |
| 행정환류론  | 1 |       |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정책학과 인사행정론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고, 재무행정론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문제를 넓게 볼 경우 16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4문제이다.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의 경우 이론 문제에 해당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이고,

법령 문제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이다.

###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    |                                                  |
|----|--------------------------------------------------|
| 상  | -                                                |
| 중상 | 6, 12                                            |
| 중  | 2, 3, 4, 5, 7, 8, 11, 13, 14, 15, 16, 17, 19, 20 |
| 중하 | 1, 9, 10, 18                                     |

### 4. 당부 사항

-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특정 학자의 입장이나 법령 내용)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2020 국가직 7급

-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 ① 카오스 이론                      ② 상황조건적합 이론  
③ 자원의존 이론                  ④ 대리인 이론

[해설] ④(0). 박스 내용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관한 내용으로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①(X). 혼돈 이론(카오스 이론, chaos theory)은 혼돈 상태(chaos)를 연구하여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와 양태를 찾아보려는 접근 방법이다.
- ②(X). 상황조건적합 이론(contingence theory)은 상황변수(환경, 기술, 규모 등), 조직특성변수(조직구조, 관리체계, 관리 과정 등), 조직의 효과성의 세 가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상황변수에 적합하게 조직특성변수가 설계되어야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 ③(X).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얻기 위해 조직 외부의 많은 다양한 조직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조직과 조직 간의 거래관계에서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조직(조직 관리자)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60-161. 핵심체크, p.65.

2.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직 7급

<보기>

-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 [illegible]

[해설] ㄱ. (0).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분배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 나. (X).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 ㄷ. (O).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베렐(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 르. (X).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정책은 규제정책이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23-225. 핵심체크 pp.93-94.

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 ②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 ③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④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해설] ④(X).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 지지가 높은 의제로서, 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 의제를 채택한다.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하는 모형은 동원형이다.

| 대중 지지(관여)의 성격<br>논쟁의 주도자 | 높 음      | 낮 음  |
|--------------------------|----------|------|
| 사회적 행위자(민간)              | 외부주도     | 내부주도 |
| 국가(정부)                   | 군히기(공고화) | 동원   |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33-234. 핵심체크 p.99.

#### 4.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 ② 번스(Burns)와 스토크(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 ③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 ④ 버나드(Barnard)는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해설] ①(0). 전략적 선택론은 전략적 선택이론은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②(0). 번스(Burns)와 스토크(Stalker)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구조가 적합하고,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③(X).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구조와 환경적소(enviromental niche)는 일대일의 관계가 존재하며, 동일성의 원칙(principle of isomorphism)에 입각하여 조직구조는 환경적소로 편입되거나 도태된다고 본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인간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④(0). 버나드(Barnard)는 행태주의(경험주의) 학자로서, 조직 내 인간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조직을 협동체제로 보면서, 조직 내 비공식조직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70-377. 핵심체크 pp.160-165.

#### 5.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직무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 ② 직무자료 수집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 ③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 분류를 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 ④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요소비교법 등 비계량적 방법과 점수법, 분류법 등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해설] ①(X).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은 직무평가이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사실상 횡적인 분류와 유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0).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 내용, 책임도·권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일지기록법 등을 이용한다.

③(X). 직위분류제는 준비작업 →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 정급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④(X).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하고,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에 해당한다.

| 구 분         | 비계량적인 방법(전체) | 계량적인 방법(요소) |
|-------------|--------------|-------------|
| 직무와 직무의 비교  | 서열법          | 요소비교법       |
| 직무와 기준표의 비교 | 분류법          | 점수법         |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53-555. 핵심체크 pp.250-252.

6.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직 7급

| <보기>                                                         |  |
|--------------------------------------------------------------|--|
| 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  |
|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
|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  |
|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

- ① ㄱ, ㄴ  
③ ㄴ, ㄷ

- ② ㄱ, ㄷ  
④ ㄷ, ㄹ

- [해설] ㄱ. (X).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ㄴ. (O).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도입되어 있다.
- ㄷ. (O).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 구 분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
| 등록 의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무직공무원</li> <li>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li> <li>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li> <li>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li> <li>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교육감·교육장</li> <li>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li> <li>공직유관단체의 (한국은행, 공기업 등) 임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li> <li>2급 이상의 군무원</li> <li>감사원, 국세청 및 관세청, 부패방지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li> <li>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li> <li>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li> <li>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li> <li>회계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회계 담당 공무원</li> <li>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li> <li>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li> <li>국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li> <li>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소방위·소방장 제외 가능)</li> <li>대학의 처장·실장</li> <li>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li> <li>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등</li> </ul> |

- ㄹ. (X).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법                                                                                                                                                                       |                                                                                                                                                    | 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 신분상 의무                                                                                                                                                                       | 직무상 의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서</li> <li>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 필요</li> <li>품위 유지(직무 내의 불문)</li> <li>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li> <li>정치운동 금지</li> <li>집단행위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실</li> <li>친절·공정</li> <li>종교중립</li> <li>복종</li> <li>직장 이탈 금지</li> <li>비밀 엄수(퇴직 후에도)</li> <li>청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충돌 방지 의무</li> <li>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제도</li> <li>선물신고제도</li> <li>퇴직공직자 취업제한</li> <li>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신고 및 처리 - 내부고발자 보호</li> <li>비위면직자 취업제한</li> <li>국민감사청구제도</li> <li>고충민원 조사·처리</li> <li>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li> </ul> |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28, 637-639. 핵심체크 pp.281-285.

7.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0 국가직 7급

|   |             |             |             |
|---|-------------|-------------|-------------|
|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
| ①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제도동형성       | 경로의존성       |
| ② | 거래비용        | 경로의존성       | 제도동형성       |
| ③ |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거래비용        |
| ④ | 경로의존성       | 전략적 상호작용    | 중범위 수준 제도분석 |

[해설] ②(0).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으며,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둔다. 역사적 제도주의의는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시하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유질동형화(isomorphism)를 중시한다.

①③④(X). 중범위 수준의 제도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고,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다.

| 구 분   | 역사적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사회학적 제도주의                       |
|-------|---------------------------------|--------------------------|---------------------------------|
| 제 도   | 공식적 법령+비공식적 규범                  | 공식적 법령+비공식적 규범           | 공식적 법령+비공식적 규범                  |
|       | 공식적 측면 중시                       | 공식적 측면 중시                | 비공식적 측면 중시                      |
| 인간관   | 제한된 합리성 또는 탈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또는 탈합리성                 |
|       | 만족화주의자                          | 극대화주의자(합리적 인간관)          | 만족화주의자                          |
| 선호 형성 | 내생적x                            | 외생적                      | 내생적                             |
|       | 사회 내에서의 제도의 영향                  | 태어날 때 이미 형성              | 사회 내에서의 제도의 영향                  |
| 인간 행동 | 제도와 자신의 선호 반영                   | 제도와 자신의 선호 반영            | 제도와 자신의 선호 반영                   |
|       | 제도적 결정론 성격 강(선호가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 | 자발론(임의론)과 제도적 결정론 절충     | 제도적 결정론 성격 강(선호가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 |
| 제도 형성 | 역사적 과정                          | 전략적 행위, 균형               | 인지적 측면                          |
|       | 권력 불균형(비대칭) 반영                  | 합리성, 효율성, 결과성            | 정당성, 수용성, 적절성                   |
| 제도 변화 |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결절된(단절적) 균형, 외부적 충격 | 비용편익 비교, 전략적 선택, 결과성의 논리 | 유질동형화(isomorphism), 적절성의 논리     |
| 제도 역할 | 정책 및 정책 결과에 영향                  | 거래비용의 최소화                | 인간 행동의 구조화, 안정화                 |
| 방법론   | 귀납적, 사례연구, 비교연구                 | 연역적, 일반화된 이론             | 귀납적, 경험적 연구, 해석학                |
|       | 방법론적 총체주의                       | 방법론적 개체주의                | 방법론적 총체주의                       |
| 유 래   |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54-159. 핵심체크 pp.62-64.

8.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신축적 조정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 ②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상향식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 ④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해설] ①(X).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효과적(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 및 수단의 신축적 조정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 ②(X).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엘모어(Elmore)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③(X). 상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한 것은 엘모어(Elmore)가 제안한 후방향적 연구(backward mapping)이다. 전방향적 연구(forward mapping)는 하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 ④(O). 고긴(Goggin)은 통계적 연구설계의 바탕 위에서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제3세대 집행 연구를 주장하였다. 제3세대 집행 연구는 관심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고, 다지역 또는 다정책 전략으로서 측정의 수를 늘리며, 유사성과 비교성에 입각한 측정의 수를 선택하고, 크고 작은 사례연구, 실험과 준실험의 방법을 혼용할 것을 주장한다.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07-312. 핵심체크 pp.130-131.

## 9.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 ②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 ③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 ④ 조직구성원의 힘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해설] ④(X). 학습조직은 팀학습(team learning)을 중시한다. 즉, 팀의 역량 구축 및 학습을 중시한다.

| 구 분      | 관료조직                                               | 학습조직                                        |
|----------|----------------------------------------------------|---------------------------------------------|
| 편 의      | 조직적 권력(계층적 권력)                                     | 개인적 권력(전문적 권력)                              |
| 지 향      | 업무                                                 | 설계                                          |
| 조직구조     | 기능 기반의 수직적 계층구조                                    | 프로세스 중심의 수평적 평면구조                           |
| 업무 배분    | 원자적(atomistic) 구조 : 전문화·분업화의 원리에 의해 업무 범위가 좁고 명확함. | 관계적 접근 : 역량권 부여로 조직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 |
| 정보 배분    | 최고 관리층이 독점                                         | 조직 구성원이 공유                                  |
| 의사결정의 틀  | 개인적 학습                                             | 집단적·조직적 학습                                  |
| 미래 행동 기반 | 최근의 과거 경험                                          | 온라인(on-line)학습                              |
| 업무의 기초   | 독점적 권한                                             | 공동생산                                        |
| 행 동      | 합리적 목적                                             | 변화를 위한 학습                                   |
| 변화 발생 상황 | 조직의 자기 정체성 및 안정성                                   | 안정적 상태의 상실                                  |
| 업무 수행    | 자율적 행동, 경쟁 중시                                      | 집합적(collective) 행동, 협력 중시                   |
| 목표 확인    | 계획된 일정 및 단위부서의 통제                                  | 공유된 의문과 통합된 인식                              |
| 관리 개선 결과 | 통제된 생산성                                            | 강력한 생산성                                     |
| 조직문화     | 위계적·경직적 문화                                         | 개방과 변화를 중시하는 적응적 문화                         |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20-422. 핵심체크 pp.187-188.

## 10.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 ②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특성은 리더가 정직성, 가치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 ③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 ④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설] ①(X).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에는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다. 자유방임은 변혁적 리더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O). 진성리더십의 개념은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진정성(authenticity)은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신 내면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등에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자기규제(self-regulation) 등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자기인식은 현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 강점, 목표, 핵심 가치관, 믿음, 욕망 등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며, 자기규제는 개인이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행위와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의 리더에 대한 긍정적 모델링(positive modeling)을 통해 내재화되는 진성팔로워십을 형성한다. 진성리더십은 진성팔로워십의 형성을 통해 부하들의 신뢰, 몰입, 작업장 안녕 등의 행태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부하들의 행태는 지속가능하고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된다.

③(O).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④(O).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이나 지원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즉,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68-471. 핵심체크 pp.212-213.

## 11. 다음 설명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분석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2020 국가직 7급

<보기>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서 활용된다.

- ①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의 적용
- ② 익명성 보장과 반복
- ③ 통제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처리
- ④ 전문가 합의

[해설] ②③④(O). 박스 내용은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대한 내용이다. 델파이 기법은 먼 미래 사건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의 식견 있는 견해를 획득·교환·개발하는 판단적 예측 절차로서, 정책결과의 예측 외에 정책대안의 개발 및 창출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 유사점         | 차이점        |                 |
|-------------|------------|-----------------|
|             | 전통적 델파이 기법 | 정책델파이           |
| ① 미래 예측 기법  | 일반 문제      | 정책문제            |
| ② 주관적 예측 기법 | 전문가의 합의    | 대립되는 의견 표출      |
| ③ 전문가의 참여   | 전문가의 참여    | 전문가 외에 이해관계자 참여 |
| ④ 익명성       | 완전한 익명성    | 선택적 익명성         |
| ⑤ 반복 조사     | 토론 없음.     | 토론 있음.          |
| ⑥ 통계처리      | 일반적인 통계처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①(X). 조건부확률과 교차영향행렬은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에서 적용된다. 교차영향분석은 사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차영향분석은 조건확률을 이용한다. 조건확률  $P(E1/E2)$ 는  $E2$ 가 주어졌을 때  $E1$ 이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63-265. 핵심체크 p.111.

12.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보기>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②(X).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례대표제는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O).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33-537. 핵심체크 pp.239-241.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A 의원은 45일간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받았다.
- ② B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징계를 받았다.
- ③ C 의원은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다.
- ④ D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는 징계를 받았다.

[해설] ①(X). 지방의회의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에는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887. 핵심체크 pp.405-406.

14.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주요 주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특성을 갖는다.
- ②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 부동산의 사용가치(use value),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 ③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 ④ 신다윈론에서는 정책과정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은 의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해설] ①(X).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행위자는 ① 이익집단, ② 기업인, ③ 도시정부, ④ 관료제, ⑤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②(X). 몰로치(H. Molotch)나 돔호프(W. Domhoff)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에 따르면, 성장연합은 토지의 교환가치(시장가격이나 임대수익)를 중시하면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꾀하고, 반성장연합은 토지의 사용가치(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를 중시하면서 삶의 질이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③(O). 지식경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비대칭성(asymmetry)이 심화되면 엘리트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아진다.

④(X). 신다윈론(Lindblom, Peterson) : 다윈론이 주장하는 정책 과정의 공개성과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정책과정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편, 엘리트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게 되는 것을 엘리트론은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과 이를 이용한 엘리트 집단의 의도적 노력의 결과로 보는 반면, 신다윈론은 이를 자본주의 구조 아래 이루어지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833-835. 핵심체크 p.381.

15.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 ②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③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 ④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동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설] ①③④(0).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시행기관(중앙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에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총액인건비제 주요 내용> |                                                                                                                               |
|----------------|-------------------------------------------------------------------------------------------------------------------------------|
| 구 분            | 주요 내용                                                                                                                         |
| 예 산            |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
| 보 수            | ●인건비 중 기본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시행기관이 관리한다.<br>●운영경비 중 맞춤형 복지예산은 시행기관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
| 기 구            | ●국장급 이상 기구는 현행대로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나, 팀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                                                                            |
| 정 원            |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상 총정원과 4급(상당)이상의 정원을 관리한다.<br>●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총정원의 5%(책임운영기관은 7%) 이내 증원, 계급별·직급별 정원배정 등)을 관리한다. |

- ②(X). 노무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4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었고, 2007년 1월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의규정 형태로 도입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03.3.)에 의해 시범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2007년 12월 개정에 의해 임의규정 형태로 도입되었다.

[정답] ②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10, 796. 핵심체크 pp.272, 363.

16.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 ③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④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해설] ①(0).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등 정부의 재정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013년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대상에 선정되었다.

③(X).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은 통신·방송·인터넷 등을 통합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품질보장형 통합 네트워크를 뜻한다.

한편, 스마트워크(smart work)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재택근무+모바일근무+스마트워크센터)를 말한다.

④(0). 전자정부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부서비스 Re-디자인, 인자·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등이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95, 779, 979-983. 핵심체크 pp.448-450, 354, 456.

17.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 ③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 ④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해설] ①(O).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서비스 공급 수준을 늘리려고 한다.

②(O).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은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③(O).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즉, 관료들은 민영화, 분봉(分蜂, hiving-off), 계약공급(contracting-out)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기는 전략을 취한다.

④(X).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이론은 관료의 효용함수에서 편의성(convenience)이 지니는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고, 부서들 간의 차이점(variations)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반해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49-151. 핵심체크 pp.60-61.

18. 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
- ②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experiment)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이다.
- ③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지향적(retrospective)인 성격을 갖는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에 해당된다.
- ④ 짝짓기(matching)를 통하여 제3의 요인에 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해설] ③(X). 회귀-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에 해당된다.

| 진실험설계 |        |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적 통제집단설계                                                                        |                                                                                  |
|-------|--------|----------------------------------------------------------------------------------------------|----------------------------------------------------------------------------------|
| 준실험설계 | 측조된 통제 |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br>㉡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노화준), 사후테스트(측정) 비교집단 설계를 비실험설계로 보는 시각 있음(정정길 외)<br>㉢ 회귀불연속설계 |                                                                                  |
|       | 재귀적 통제 | ㉠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br>㉡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
| 비실험설계 |        | ㉠ 시계열분석<br>㉡ 회귀분석<br>㉢ 정책실시전후비교설계                                                            | ㉠ 통계적 통제 - 외생변수 영향력 통제<br>㉡ 포괄적 통제 - 표준과 비교<br>㉢ 잠재적 통제 - 관련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주관성 개입) |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32-335. 핵심체크 pp.141-143.

19.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② 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 ③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 ④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해설] ①②(0).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은 Thumaier & Willoughby(200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부 예산에 대한 과정적 접근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아래 표 내용 참조).

- ③(0). 킹던(Kingdon)의 모형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각각의 정책과정에서 독립적인 흐름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한편,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 ④(X).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제약조건의 정치와 관련되며,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에 관심을 둔다.

| 흐름       | 정치               | 관심                        |
|----------|------------------|---------------------------|
| 세입 흐름    | 설득의 정치           |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 세출 흐름    | 선택의 정치           | 지출의 우선순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
| 예산균형 흐름  | 제약조건의 정치         |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
| 예산집행 흐름  | 책임성의 정치          | 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
| 예산 과정 흐름 |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 예산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98-699. 핵심체크 p.315.

20.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직 7급

- ①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②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 ④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③(X).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조세(국세 또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담금은 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 ①(0).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담금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이나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댐건설)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도로 손괴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②(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이나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처럼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끼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④(0).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관리기본법)를 둔다(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899, 919. 핵심체크 pp.411, 417.